

한국사회의 부패 방지 메커니즘 모색

이 중 수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

직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바보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한국정치의 진정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사회의 상징이자 가치이어야 하는 대통령이 극단적 행동을 저지른 것에 불편한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냥 먼 발치서 이 사건을 바라보자면, 분명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폭력성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 했다는 것이 가감 없는 사실이다. 이 비극의 원인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추구하는 결벽증에서 찾던, 현 정권과 검찰의 정치적 보복으로 돌리던, 한국사회에 관행화된 부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깨끗한 도덕성을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도 상관없이 부패가 자행되고 있고, 후임 정권에 의해 선택적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사회가 놓인 현실이다.

권력형 부패의 관행화는 대통령들의 비극을 불러왔다. 정권초기에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다가, 정권 말기에는 TV앞에 나와 병풍을 배경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 1월 23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사과를 하고 백담사로 떠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5년 10월 27일 2천300억 원대의 비리 발각으로 사과를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2월 26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사과문을,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6월 21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로 시작하는 사과를 했다. 2009년 5월 23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였다.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돈을 거액으로 오고간 혐의들에 직간접 연결되어 있었다.

함께(co) 망하는(rupt) 의미의 부패(腐敗)

부패는 함께(co) 망한다(rupt)는 뜻이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다. 권력층의 부패는 더욱더 그렇다.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누수시키며, 정책결정과 집행을 왜곡시킨다. 얼마 전 필자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가 내뱉은 탄식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그는 다짜고짜 대통령들을 원망하며, 이럴 바에야 대통령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편이 낫겠다고 한탄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받은 것이 퇴임 후면 어김없이 밝혀지니, 그 측근들은 어떠했을 것이며, 결국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탐하고 누리는 허가증을 5년 받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택시를 모는 민초의 절망감과 분노가 하도 격해서 그의 목소리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우리가 러시아 같은 약탈정치형 정치구조는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자들이 연이어 부패에 연루되는 관행을 고쳐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찬반으로 나눠 싸우기 전, 한국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현 단계에서 맡겨진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 사회는 2008년 국제 반부패지수 평가

(CPI)에서 40위로 평가되었다. 36위가 보츠와나(Bostswana), 몰타(Malta),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등 세 나라였고 39위가 대만, 41위는 모리셔스(Mauritius)와 오만(Oman)이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청렴성 수준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고위 관료들의 포획현상과 일선 관료들의 부조리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들의 경우에는 사익에 의한 포획 현상이 문제다. 직접적으로 돈을 거래하는 부조리보다도 옷을 벗은 후의 취직이나 이익의 거래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거래가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고위 관료들의 재량이라는 베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단순히 퇴임 후 유관 사업을 하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놓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공익이 훼손되고, 공직자의 재량이 어떤 특혜로 은폐될 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장관, 장군, 청장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 후 할 일을 찾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지 못하다.

옛날에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에 오랫동안 봉직하며 수고한 사람에게는 임금이 궤장연(几杖)을 하사했다. 나무로 정성스럽게 만든 의자와 지팡이를 주어 그 수고를 치하하고, 편히 쉬라는 사회적 존경의 의미를 수여했던 것이다. 영국에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공직자, 언론인, 군인, 학자들에게 Sir, Lady, Lord 같은 작위를 수여한다. 퇴임 후 자리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그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의미의 체계로서 충분히 작동하고도 남는다. 전별금 몇 억으로도 담보할 수 없는 사회적 존경의 의미이자 전통이고, 부조리를 예방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선의 하위 공직자들도 부패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건축, 주택, 조세, 경찰 등이 우리에게 우울한 소식을 빈번하게 들려주는 분야이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청렴하고 단지 7%의 하위 공직자가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모든 사회에 넘쳐나게 되는 법이다. 이들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는 우리가 의지만 명백하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다.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메커니즘

우리가 진정 선진국을 이루고자 하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국정원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집권자의 퇴임 후 뒤늦은 사정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년 임기 내에도 집권 세력을 향하여 견제구를 날리고 큰 소리로 짚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부패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견제해야 할 국정원의 수장이 외국에 있는 대통령 자녀들에게 부당 자금을 송금하는 일을 솔선했다는 혐의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검찰을 권력으로 독립시켜 부패를 감시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인선을 독립적 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손쉬운 방법은 자치단체의

모든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순환보직으로 잠시 와있는 공무원이 동료들의 비리를 캐고,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사관이라도 시민 운동가나 외부 전문가가 눌러앉아 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면 명백히 부패는 줄어들 것이다. 모든 의혹과 제보에도 나몰라라 하는 현재의 감사체계는 '가재는 개편'이라는 푸념만을 온존시킬 것이다. 어찌면, 정부 모든 부처의 감사관을 아예 직전 5년 동안 공직에 머물지 않았던 외부인으로 채용하고, 3년 임기 후에는 공직에 머물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